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국민권익위원회</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씨에이에스</td><td>평가기간</td><td>2024.8.19
~
2024.12.18</td><td>평가예산</td><td colspan="2">□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td><td>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 colspan="2">2024.6.4. ~
2025.6.4.</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일반·특별 행정심판 등 행정심판 기관의 온라인 행정심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더욱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 일반·소청·조세·보상보험·토지 등 5개 분야별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는 단일시스템을 신규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기반 마련</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요건 중 4호(기존에 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에 해당</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14,146,000,000원</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행정심판 통합추진단 통합지원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구축계약서(2024년 6월)</td><td>추진유형</td><td>□ 신규 구축
■ 변경(고도화)
□ 운영</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해당없음</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행정심판 창구일원화 및 전자행정심판 통합시스템 구축
– 청구인·피청구인·참가인 등(대리인 포함)이 자기의 권리를 전자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전자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홈페이지 및 업무처리 시스템 통합
❍ 국민 알권리 강화 및 편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구축
– (행정청)「행정심판법」제58조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의 절차로 행하는 행정심판의 고지 내용을 관리하는 ‘범정부 처분관리시스템’ 구축
– (위원회) 범정부 처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처분명을 근거로 좀 더 촘촘한 ‘사건분류체계 관리시스템’ 구축
– (위원회) 사건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재결서의 ‘개인정보 비식별 및 공개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위원회·피청구인) 처분·사건분류 DB와 개인정보 비식별된 검토의견서·답변서 등을 활용한 ‘지능형 사건처리시스템’ 구축</td></tr>
<tr><td>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td><td colspan="6">❍ 기존 시스템 추가 변경: 기존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재구축함.
❍ 개인정보 수집 경로 및 처리절차 확대: 기존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은 일반과 소청기능만 구현되어 있어 일반·소청·조세·보상보험·토지 등 5개 분야별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구축함.</td></tr>
</table>

<table>
<tr><td rowspan="5">개인정보파일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행정심판 시스템 회원 정보</td><td>264,031</td><td>(필수) : 이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CI, DI
(선택) : 전화번호</td><td>해당없음</td><td>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관리 목적</td></tr>
<tr><td>행정심판 사건원장 정보</td><td>1,194,328</td><td>(필수) : 이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처분내용, 증빙문서
(선택) : 전화번호</td><td>해당없음</td><td>행정심판 청구 및 심판(심의) 목적</td></tr>
<tr><td>국선대리인 정보</td><td>50</td><td>(필수) :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격, 활동지역, 소속, 주소
(선택) : 성명(한자), 전화번호, FAX 번호, 이메일, 직위, 거래은행, 계좌번호, 주요 경력</td><td>해당없음</td><td>국선대리인 선정 및 배분 목적</td></tr>
<tr><td>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명단</td><td>66</td><td>(필수) : 성명(한글), ID, 비밀번호, 주소, 성별, 지역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내선번호, 휴대전화번호, FAX 번호, 출신학교, 직장, 직위, 거래은행, 계좌번호, 차량번호, 경력사항</td><td>해당없음</td><td>행정심판 심의위원회 운영 목적</td></tr>
<tr><td colspan="5">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td></tr>
</table>

1. 개인정보의 처리

❍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용자 정보 수집

- 행정심판 청구 및 관련 당사자(대리인, 국선대리인, 법인 등의 임직원)는 사용자 등록 후에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음.

❍ 개별 행정심판 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하고 피청구인(처분청)에게 통보함(개인정보의 공동 활용).

- 위원회는 행정심판과 관계된 다양한 심판 참가자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심의 시에 활용하거나 심의 참여를 승인함.

❍ 위원회는 행정심판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비상임위원 포함)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심의위원은 위원회로부터 청구인 정보를 제공받아 심의함.

❍ 위원회는 국선대리인 명부를 관리하며 청구인이 요청 시 국선대리인을 배정함.

❍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시스템 외부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은 없음.

❍ 사용자 정보는 탈퇴 시 즉시 파기하며, 행정심판 원장정보는 준영구로 보유, 국선대리인 및 심의위원 정보는 해촉 시 파기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통합 홈페이지에서는 모의행정심판 신청자 정보를 수집하며, 해당 정보는 모의행정심판 행사 종료 후 즉시 파기함(일회성 이벤트로 수집하는 정보로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상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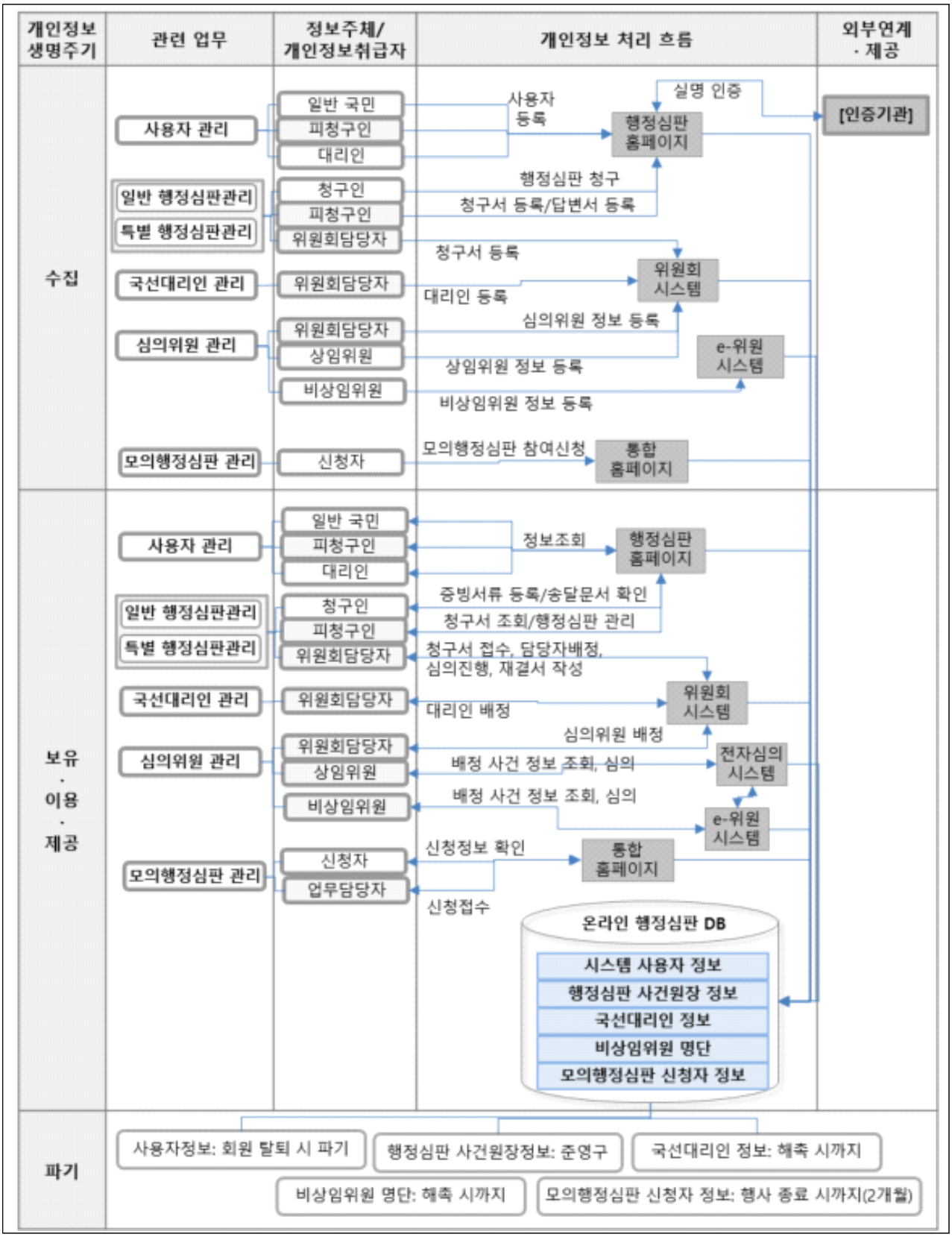
2.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붙임] 참조

영향평가기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평가항목 추가: 공공시스템 보호조치에 관한 9개 항목 추가 평가항목 삭제: 특정 IT 기술 활용은 활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30개 항목 삭제
	주요 평가기준	❍ 공공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따른 평가기준 - 시스템 내부관리계획 수립, 전담 부서 또는 전담인력 배치,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협의회 설치 등을 적용 ❍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법적 요건에 맞게 시스템에 구현되었는지 평가 - 피청구인 등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외부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되, 시스템에 구현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기능이 법령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는 평가범위에 포함(예: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 평가)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공공시스템으로서 내부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접속기록 자동화 분석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있음.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적정하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사용자 정보'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5조, '국선대리인 정보'는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6, '비상임위원 명단'은 행정심판법 제8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수집함. '행정심판 사건원장' 정보는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23조, 제28조, 제29조 등에 근거하여 수집함. - 그러나, 정보주체의 청구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나 행정심판법에는 이에 대한 처리근거가 없고 별도 동의를 받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의 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는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개인정보의 침해요인이 발견됨. ❍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 -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및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술적 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 다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재결례를 익명처리하고 있으나 익명처리 검토를 위한 기준 등이 상세하지 않음.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 일반 행정심판 시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필요(행정심판법 시행령 개정 또는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구분 동의 확보) ❍ 개인정보를 파기절차에 따라 파기하고 파기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기능 구현 권장 ❍ 개인정보의 안전한 익명처리에 대한 검토 기준 강화, 강화된 검토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검증 필요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동시에 법령 근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정하게 취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정보주체는 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행정심판 청구 시 입력하해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인지하고, 선택 정보 입력 여부를 판단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행정심판 청구 시에도 증빙서류에 과도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평가결과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재구축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할 예정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제공, 위탁, 보유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설계하고 있으며,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구분동의 구현은 단기과제로, 개인정보 파기 절차 수립은 장기과제로 조치할 예정임. 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기술적 보호조치는 양호하게 설계되었으며, 개인정보 익명화 기준 강화 또한 단기적으로 조치할 것으로 판단함.

[붙임] 개인정보흐름도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련 업무
정보주체/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 처리 흐름
외부연계 · 제공
수집
사용자 관리
일반 국민
피청구인
대리인
사용자 등록
실명 인증
행정심판 홈페이지
[인증기관]
일반 행정심판관리
특별 행정심판관리
청구인
피청구인
위원회담당자
행정심판 청구
청구서 등록/답변서 등록
청구서 등록
국선대리인 관리
위원회담당자
위원회 시스템
대리인 등록
심의위원 관리
위원회담당자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심의위원 정보 등록
e-위원 시스템
상임위원 정보 등록
비상임위원 정보 등록
모의행정심판 관리
신청자
모의행정심판 참여신청
통합 홈페이지
보유 · 이용 · 제공
사용자 관리
일반 국민
피청구인
대리인
정보조회
행정심판 홈페이지
일반 행정심판관리
특별 행정심판관리
청구인
피청구인
위원회담당자
증빙서류 등록/송달문서 확인
청구서 조회/행정심판 관리
청구서 접수, 담당자배정, 심의진행, 재결서 작성
국선대리인 관리
위원회담당자
위원회 시스템
대리인 배정
심의위원 관리
위원회담당자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심의위원 배정
전자심의 시스템
배정 사건 정보 조회, 심의
배정 사건 정보 조회, 심의
e-위원 시스템
모의행정심판 관리
신청자
업무담당자
신청정보 확인
통합 홈페이지
신청접수
온라인 행정심판 DB
시스템 사용자 정보
행정심판 사건원장 정보
국선대리인 정보
비상임위원 명단
모의행정심판 신청자 정보
파기
사용자정보: 회원 탈퇴 시 파기
행정심판 사건원장정보: 준영구
국선대리인 정보: 해촉 시까지
비상임위원 명단: 해촉 시까지
모의행정심판 신청자 정보: 행사 종료 시까지(2개월)